

머리말

올해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창립 반세기를 맞이합니다.

돌이켜 보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언론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언론감시 기구를 만든 것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언론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매스미디어 분야는 천지개벽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분초를 다투는 인터넷 뉴스까지 등장, 새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천지동의 변화를 소리 없이 수용하면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은 특별한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립 반세기를 맞아 지난 한 회기의 활동을 정리하는 ‘심의결정집 5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여간 뜻 깊은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심의결정집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 동안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국내 90여 신문사들이 발간한 일간신문의 기사와 광고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를 묶었습니다. 지난 회기 기사 부문 강령 위반은 모두 775건이고 광고부문의 위반 사례는 총 186건에 이릅니다.

기사 부문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제재가 684건이고 경고 제재는 87건이며, 재심을 청구한 4건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고 부문의 결정은 주의가 154건이고 비공개경고 29건, 자사 신문에 경고 사실을 게재하는 경고가 3건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윤리위원회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 추세에 맞춰 실천요강 중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조항에 저촉되는 기사와 사진에 대해 심의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회기에도 지방 신문들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에 대거 저촉돼 125건이나 지적됐고 표절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사례도 44건에 이릅니다. 그런가 하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94건이나 됩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국가나 권역이 늘어나면 이 분야에 대한 다툼이 언론계의 초미 관심사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신문의 신뢰를 좌우하는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분야는 신문사와 기자 개인에게 재산상이나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에 있어서는 지난 해 보다 10여 건 늘어난 42건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명예훼손에 피소될 수 있는 사례들도 배로 증가해 85건에 이릅니다. 이는 지방의 신생 신문사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빚어지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문 시장의 경영 악화를 반영하는 실천요강 제1조 2항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조항 위반도 지난 회기와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326건에 이릅니다. 신문 경영의 자립 없이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홍보성 기사나 광고성 섹션 기사의 생산을 심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광고 부문에서의 위반 사례는 독자(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이 130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광고윤리 강령을 되새겨 볼 단계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심의결정집’은 단순히 윤리위원회의 한 회기 활동을 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는 곧 지난 한 해 한국 언론의 얼굴이자, 역사 그 자체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선에서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현장 자료’가 바로 이 ‘결정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계는 물론 관련 학계와 단체에서 널리 활용되어 다음 반세기 한국 언론의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결정집이 나오기까지 바쁜 가운데 매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리위원 여러분과 매일 같이 전국의 신문을 세심하게 분석, 심의자료를 마련해 주신 심의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11년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고 현 철